

태평양 도서국가의 生態的 安全保障 (ecological security) 연구*

- 日本 지자체 平和運動에 주는 교훈 -

김진호**

요 약

태평양 도서국가의 대부분은 인구가 적고 국토가 좁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경계하는 경찰력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도서국가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독립을 달성했지만 외교관계, 특히 안전보장관계는 기존의 강대국에 의존하는 독립의 형태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이 약소국들은 핵 반입 금지를 위하여 국제 기구를 창설하여 스스로 국가안보를 쟁취하려는 신 사고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South Pacific Nuclear-Free Zone Treaty: 일명 Treaty of Rarotonga)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주체가 강대국이 아닌 바로 이 지역의 도서국가라는 것이다.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최소국들(mini-states)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이 조약은 조약으로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비핵지대 조약이 제정되어도 태평양 도서국가의 안전을 위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태평양 지역의 핵의 존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핵실험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상존하고 있다. 핵 기지, 원자력 잠수함·함선, 순항미사일,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은 핵무기 사용을 가능케 하는 여러 설비가 태평양 전역에 산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은 이 지역을 핵 폐기물의 처리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환경문제 발생원인의 국제성을 감안하면 긴밀한 국제협력에 의한 공동노력이 결여될 경우, 대책의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핵화운동의 기저인 생태적 안보의 의미를 살펴보고 태평양 도서국가의 비핵화활동의 의의를 고찰하여 일본 지자체의 평화운동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I. 서론

미군은 1944년 남태평양의 테니안 섬에 비행장을 완성하였고, 태평양전쟁을 종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의 발진기지로 사용하였다. 원폭투하 40 주년인 1985년 8월 6일 『남태평양포럼』(South Pacific Forum, 이하 SPF로 지칭) 가맹국은 이 지역의 비핵지대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것은 『중남미비핵지대조약』에 이은 두 번째의 비핵지대 조약의 창설이었다. 그러나 당시 그 지역에 핵 실험장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프랑스의 마지막 핵실험이 끝난 후인 1998년 3월 프랑스를 비롯한 미국, 영국이 서명함으로써 의정서 관련 국가들 모두 서명을 마치게 되었다.

이처럼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South Pacific Nuclear-Free Zone Treaty: 일명 Treaty of Rarotonga)은 그 주체가 강대국이 아닌 바로 이 지역 도서국가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최소국들(mini-states)¹⁾이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조약은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지대 조약이 제정되었어도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안전을 위한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태평양 지역의 핵의 존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핵실험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²⁾로 상존하고 있다. 핵 기지,

1) 최소국은 독립 또는 준독립을 달성했지만 아직도 식민지적인 종속상태에 있고 고립된 도서국가들이다. 대부분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자위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진호(역), M. Handel(저), 『약소국 생존론』(서울: 대왕사, 1995), pp. 59-60.

2) 1996년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실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뒤 핵실험 동결을 선언한 프랑스는 1998년 6월 23일 핵실험 관장 기구를 공식 해산했다.

원자력 잠수함·함선, 순항미사일,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은 핵무기 사용을 가능케 하는 여러 장비와 설비가 태평양 전역에 산재해 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은 이 지역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은 원자력 선진국이나 핵 보유국과 비교할 때, 실로 넓은 바다 속의 '작은 고기' 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 국가들 대부분은 오랜 식민통치를 겪고 1970~80년대 들어서야 독립하였다. 그러나 세계 시스템의 주변에 위치한 도서국가들은, 독립은 했지만 강대국이나 구 중주국에 대한 의존관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에서 비롯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이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은 자국 내에서 소비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생겨나는 쓰레기처리 뿐만 아니라 처리장의 입지선택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그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태평양 도서국가들이다.³⁾

알랭 리샤르 국방장관의 주제로 이 기구를 해체, 프랑스 핵실험 프로그램의 최종 마감을 상징하는 기념행사가 거행됐다. 프랑스의 핵실험은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인 1945년 10월 시작돼 1960년부터 1996년까지 총 2백10회의 핵실험이 실시됐다. 최초의 실험은 알제리 사막에 위치한 핵실험 기지에서 시작되어 62년 7월 알제리가 독립한 뒤인 66년까지 이용되었다. 프랑스는 62년 9월부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모로로아와 판가타우파 산호초에 태평양 실험센터 건설을 시작, 이곳에서 1백93회의 지하 및 대기 핵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95년 9월부터 96년 1월에 실시된 일련의 핵실험들로 전 세계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프랑스는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계기로 남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에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핵실험센터 소장을 지낸 앙리 파주 사령관은 르피가로紙와의 회견에서 프랑스는 미사일 및 대량파괴 무기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핵실험을 실시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 했다. 『동아일보』, 1998년 6월 24일자 참고.

- 3) 과거에 외딴 섬은 불치 환자나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또는 섬을 전장화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특히 식민지 시대에 도서국가들은 이러한 '쓰레기' 처리장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세계 시스템 주변의 도서국가들은 이 지역의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들 태평양 도서국가 주민들의 뿌리깊은 반핵 의식은 강대국 시각의 국제관계론이나 전략론과는 다른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전략연구에다 규범적 가치를 접목시키는 시도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최근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주적 평화론'(democratic peace)이다.⁴⁾ 즉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가설이며, 이는 곧 국제관계에서 인간안보가 보다 견고해질수록 평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군사력이나 국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국민국가'의 개념은 태평양의 최소·도서국가와 같은 군사적 약소국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약소국들은 이러한 강대국 논리의 피해자가 된다.⁵⁾

태평양 도서국가의 대부분은 인구가 적고 국토가 좁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경계하는 경찰력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독립을 달성했지만 외교관계, 특히 자국의 안전보장은 기존 강대국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보장에서의 독립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이 약소국들은 핵반입 금지를 위해 국제기구를 창설하면서 스스로 국가안보를 쟁취하려는 '새로운' 사고를 모색하고 있다. 환경문제 발생원인의 국제성을 감안하면 긴밀한 국제협력에 의한 공동노력이 결여될 경우 대책의 유

세계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강대국들이 도서국은 '쓰레기장'이라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쓰레기'가 불치 환자나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지는 핵실험이나 핵폐기물 또는 각종 유해물질 등으로 그 형태가 바뀌고 있다.

4) 현인택·김성한, "인간안보와 한국외교," 『IRI리뷰』, 제5권 제1호(2000겨울/2001 봄), pp. 72-73.

5) 전황수, "중국과 ASEAN의 스프래트리 군도(南沙群島) 분쟁: 갈등양상과 해결노력,"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1999), pp. 260-263; 배진수, "세계의 도서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 『국제정치논총』, 제38권 2호(1998).

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비핵화운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생태적 안보의 시각에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비핵지대조약을 통한 비핵화 활동이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비핵화 활동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지자체의 평화운동과 '무방비지역' 운동에 대한 천착을 통해 생태적 안전보장의 실천적 활동과 그 의미, 시사점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태평양 도서국가의 출현과 생태적 안전보장

1. 국제정치무대로의 등장

'태평양 도서국가' (Pacific Islands)란 일반적으로 태평양 섬들의 지리학적인 구분으로서 태평양의 중부와 서부 및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를 지칭한다. 이 도서군의 섬 수는 약 1만 여 개에 달하고, 총 육지면적은 130만 km^2 이며 이중 90%는 뉴질랜드와 뉴기니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각 도서국들은 독특한 인종, 언어, 관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평양의 도서지역은 통상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크로네시아는 적도 이북으로 날짜변경선을 중심으로 서쪽의 태평양 제도를 지칭하고 멜라네시아는 적도 이남의 날짜변경선 서쪽 도서들을 지칭한다. 폴리네시아는 주로 적도 이남과 날짜변경선 동쪽의 도서들인데, 하와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국가들이 남태평양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들의 육지면적은 뉴기니 본 도를 제외하면 불과 18만 km^2 로서 역내 인구도 파푸아뉴기니의 약 400만 명과 피지의 약 70만 명을 제외하면, 보통 40만 명 이

6) 백진현, "환경의 국제정치," 김달중·박상섭·황병무(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서울: 나남, 1995), pp. 441-442; 이해찬(역), Gareth Porter, Janet Welsh Brown(공저), 『세계환경정치: 그린라운드란 무엇인가』(서울: 돌베개, 1994).

한 협소한 육지면적과는 대조적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면하(1만 명 이하의 국가도 있음)로서 최소국가들의 집합체이다. 이리적으로 볼 경우, 약 2,900만 km^2 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을 갖고 있는 해양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태평양 도서지역은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했고,⁷⁾ 17세기에는 네덜란드 18세기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미지의 발견”을 위해 경쟁적으로 탐험대를 파견했다. 마젤란(F. Magellan), 쿡(J. Cook), 페루스(La Perouse), 발보아(Vasco de Balboa)등 탐험가의 이름이 지금도 도서국의 지명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 서구열강에 의한 태평양 도서의 식민지화는 거의 19세기 후반에 집중되었고, 영토적 야심의 대상으로서 태평양 도서지역은 모조리 식민지가 되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식민지 분할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나누어먹기’ 식이었다. 괌과 동 사모아는 미국령, 미크로네시아 지역과 서 사모아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의 일부는 독일령, 폴리네시아와 뉴 칼레도니아는 프랑스령, 기타의 도서지역은 영국령이었다.⁸⁾

7) 서구열강의 관심은 상업상의 기착지의 확보였는데, 19세기에는 일관되게 ‘중국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한 해군 기지 및 중간 기착지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대원(역), 피에르 르누벵(저), 『동아시아외교사』(서울: 서문당, 1988), pp. 167-173.

8) 1520~21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페르난두 마젤란이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의 섬들을 탐험하였다. 그후 16~18세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인들이 탐험하였고, 18세기 중반의 제임스 쿡 선장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8, 19세기에 많은 섬들에서 유럽의 선교단과 무역상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주요세력들이 태평양 전역에 걸쳐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독일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우세하였고, 영국은 멜라네시아 일부 지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폴리네시아에서 세력을 구축하였으며 프랑스는 타히티와 부근의 섬들을 합병하면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형성하였다.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신탁통치령이 될 예정이었던 마셜제도, 케롤라인 제도, 팔라우 등을 독일에게 매각하였다.

한편, 일본의 도서지역으로의 진출⁹⁾은 1914년 제1차 대전에서의 참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독일에 선전포고한 일본은 독일령 미크로네시아 전역을 무혈점령하였고 1919년 국제연맹의 발족에 따라 1920년 이후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지역으로서 1945년까지 '남양군도'(南洋群島)라는 명칭으로 미국령 괌을 제외한 적도 이북의 미크로네시아 전역을 지배했다. 미크로네시아 및 멜라네시아의 도서지역은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군과 연합군의 격전지였다. 미크로네시아의 사이판 등의 지명은 그들이 말하는 옥쇄(玉碎)의 섬 또는 비극의 섬인 동시에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야기 시켰다.

제2차 대전 이후의 태평양 도서지역의 지배체제는 1945년의 얄타 회담에 의해 결정되어 서사모아는 뉴질랜드의 신탁통치령, 나우르는 호주와 영국 및 뉴질랜드의 공동신탁통치령, 파푸아뉴기니는 미국의 신탁통치령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신탁통치가 끝나고 가장 먼저 독립한 곳은 1962년 서사모아였다. 이어 계속된 도서국가들의 독립과 더불어 국제정치무대¹⁰⁾이처럼 태평양 도서지역의 전통적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이들 독립국가들은 지역 협의·협력기구로서의 SPF를 결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서 상호단결을 강화해 나갔다. 따라서 이들 도서국가들의 동향에 선진제국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1980년대였다. SPF는 태평양 비핵지대조약의 체결(1986년), 태평양에서의 유자망어법의 금지선언, 역내 입어료(入漁料)의 일괄지불 요구, 전관경제 수역 200해리 시대를 배경으로 해양내셔널리즘의 논리를 선진제국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해 나갔다. 이러한 행동은 지금까지 무주공산(無主空山)인 이 지역에서 자기 멋대로 활동해 왔던

9) 邊地昭夫, 『アジア・太平洋の國際關係と日本』(東京: 東京大出版部, 1992), pp. 175-186.

10) Robin Cohen, "An Academic Perspective," Colin Clarke and Tony Payne(ed.), *Politics, Security and Development in Small States*(London: Allen & Unwin, 1987), pp. 203-210.

강대국의 해양인식을 바꾸어 놓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구 소련은 1985년에 키리바시와 계속해서 1986년에 바누아투와 어업협정을 체결¹¹⁾하였고 상업패스로서는 고액의 입어료를 지불하면서 역내 진출권을 확보하고, 피지나 통가에도 경제협력을 신청하는 등 도서제국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지역을 서방측의 바다로 자처하던 선진제국은 이러한 구 소련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나아가 태평양상의 '쿠바'를 출현시켜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¹²⁾을 갖게 만들었다.

도서국가들이 이러한 국제적 반응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나가자, 미국은 전략의 요충지로서 태평양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979년 오히라(大平正芳) 수상이 환상(環狀)제국의 경제적 연대를 구축하려고 '환태평양 구상'을 제창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레이건 정부의 솔츠 국무장관도 도서제국을 포함하는 '퍼시픽 커뮤니티'의 실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강대국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그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들 도서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양되었고, 이 지역에 대한 구 식민지국 이외의 국가와 국제기구에서의 경제원조가 급증하게 되었다.¹⁴⁾ 어쩌면 1980년대는 세계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태평양의 도서지역이 정치주체로서 명확히 국제사회에 인지된 시대일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들면서 선진국의 도서지역으로의 관심은 차츰 희박해져 갔다. 그 이유는 말 할 나위 없이 소련붕괴에 의한 냉전구조의 종말이었다. 태평양에서 당면한 위기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대의명분 또한 없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핵심조직으로서 주목을 집중시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

11) Sheila Harden(ed.), *Small is Dangerous*(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pp. 40-41, 44-48.

12) 小林 泉, 『太平洋島嶼諸國論』(東京: 東信堂, 1996), pp. 22-35.

13) 상계서.

14) 김진호, "태평양 도서국가의 국제관계: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기구를 통한

구』(APEC)의 활동이나 논의를 보더라도, 이 지역 도서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회의 섬들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전으로 역류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도서국가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와 동시에 소멸되어 버린 것은 물론 아니었다. 여기에는 강대국의 의도에 따라서 농락되어 온 도서국가의 비애가 있었던 것이다.

2. 생태적 안전보장의 개념

본 논문의 안전보장 개념은 부잔(B. Buzan)¹⁵⁾의 '포괄적 안보'(holistic security)와 미슈(P. Mische)¹⁶⁾의 '생태학적 안보'(ecological security) 개념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후자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사용한다. 우선, 한 국가의 안보는 해당 국민이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이 미약할수록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안보의 대상 및 수단은 단지 군사적인 것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시스템 전체와 동시에 국가, 사회, 개인 등의 측면들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의 문제와 '누가 안보를 담당하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체는 국가(정부)이고 그 객체는 국민이다. 그러나 군사적·경제적으로 최소국인 경우에는 그 주체가 반드시 자국 정부만은 아니다. 태평양 지역의 자유연합¹⁷⁾이라는 정치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제3국

자국노력을 중심으로." 『제주대 동아시아연구논총』, 제7집(1996), pp. 46-55.

15) 김태현(역), Barry Buzan(저),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서울: 나남, 1995), pp. 62-85.

16) Patricia M. Mische, "Ecological Security and the Need to Reconceptualize Sovereignty," *Alternatives*, Vol. 14, No. 4(October 1989).

17) 팔라우와 미국과 체결된 자유연합협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협정기간은 50

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도 있다. 최소국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도 외부 영향이나 압력이 안전보장 정책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평양에서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가장 극단적인 예는 원자력 선진국들이 이 지역 도서국가들을 핵 실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 침해에 대한 생태적 접근의 기본 원리는 군사적인 측면보다 비군사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본래 안전보장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 확산이 점증됨에 따라 군사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시되었다. 생태적 접근의 출발점으로서 그 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안전보장의 개념을 사용하여, 각 국의 독특한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위협과 공포에 대처해야만 하는가를 안전보장의 대상¹⁸⁾으로 하는 것이다. 생태적 접근에 의한 안전보장의 대상은 각 국의 독특한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위협과 공포들이다. 이것은 안전보장의 수혜자와 피 수혜자의 목적이 일치될수록 안전보장이 공고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핵 보유국의 핵실험은 자국의 안전보장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실험장이 되는 나라의 안전보장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¹⁹⁾ 이처럼 생태적 안전보장은 인

년이고 재정원조는 발효일부터 15년이다. 50년 협정기간은 협정 발효 후에 재교섭이 가능하다. 협정 기간 중에는 미국이 군사 안전보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팔라우공화국은 여기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외교권과 내정자치권을 갖는다. 또한 팔라우공화국의 국적보유자는 미국으로의 입국, 취직, 거주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이다.

18) 이화수, “생태사회과학: 쟁점과 접근,”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생태사회과학: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수원: 아주대학교 출판부, 1994), pp. 22-30.

19)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호가 2001년 3월 23일 오후 2시 57분(이하 한국시간) 남태평양 피지 인근에 추락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우주항공국 유리 코프테프 소장은 “단 한 차례 실수도 1mm의 오차도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예상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면서 러시아 과학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이 미르호는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1986년 2월본체가 발사돼 러시아의 자존심으로 여겨졌으며 15년간 지구

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견고한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인권, 자유, 법치주의, 사회적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적 발전론은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따라서 생태적 안전보장 접근에 따른 안전보장의 대상은 생활 환경보호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래 인간은 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을 개척하여 왔다. 이러한 개발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환경의 파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을 바란다면, '자연의 극복' 보다는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관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자명하다. 결국 환경파괴로 인한 생존위협은 염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환경파괴의 방지는 그 자체가 그대로 안보에 연결되는 것이다.²⁰⁾ 이것이 바로 생태적 안전보장이며 따라서 그 핵심은 인간이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다.²¹⁾

이러한 새로운 안전보장 개념은 결코 도서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은

를 8만6331회 선회하면서 각종 실험을 수행해왔다. 그러다가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족과 장비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 등으로 폐기 운명을 맞았다. 미르호가 피지 상공에서 20-27t에 이르는 1500여 개의 파편 조각으로 해체되기 직전 푸른 연기를 내뿜는 4개의 하얀 불덩이로 변해 약 8초 동안 '환상의 폭죽 쇼'를 연출시켜 관광수입은 가졌다 주었다. 그런데 현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러시아의 국익을 위하여 활동하여 온 미르호는 마땅히 자국 영토에 정확히 추락되도록 작동시켰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인근 해역에서 작업 중이던 27척의 어선 등 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보면 착잡하고 우울한 것이다.

20) 信夫隆司, “開發と環境の國際政治理論,” 信夫隆司(編), {環境と開發の國際政治}(東京: 南窓社, 1999), pp. 24-27.

21) 현인택 · 김성한, 앞의 글, pp. 73-80.

아니다.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공존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보장에 관한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군사적인 방법에 맡기기보다도 비군사적인 안전보장의 여러 수단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과 자연을 중히 여기는 사고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그러한 생각을 지속하고 있다. 태평양지역의 원주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환경의 '파수꾼'(care-taker)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태적 안전보장이라는 접근방법의 이면에는 그러한 선주(先住)민족의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생태적 안보라는 것은 자연과 환경을 보살펴준다는 의미에서 필연적으로 비핵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핵주의는 반(反)생태적인 것이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안전보장을 대신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 안전보장의 개념인 생태적 안보가 바로 그것이다.

Ⅲ. 비핵 내셔널리즘운동의 전개

1. 태평양 도서국가 주민의 비핵화운동

강대국이 도서제국을 태평양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지역의 도서국가가 단결하여 주장하는 정치적 행동 때문이었다. 그러한 정치적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의 체결이다. 그리고 이 조약을 계기로 그동안 선진 강대국에게 호의적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반핵 운동의 중심국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민들은 피폭국민인 일본인 이상으로 핵에 대해 민감한 감정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주변 국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6년에서 1991년까지 불령 폴리네시아의 모로로아 환초에서 핵실험을 계속하여 왔다. 과거에는 미국이

마셜 군도의 비키니 환초와 크리스마스 섬에서 원·수폭 실험을 하기도 했다. 중국 또한 태평양 공해 상에서 핵실험을 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마리아나 심해저에 방사성이 낮은 저준위(low level)의 핵폐기물을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알려지자 도서국가들의 맹렬한 반발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프랑스 핵실험의 위험이 전혀 없다면 “왜 마르세이유 항이나 파리 중심부에서 이런 실험을 하지 않는가?” 라는 폴리네시아 주민의 항의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실험은 할 수 없다” 라고 답하고 있다.²²⁾ 이것은 강대국이 태평양을 단순한 공간으로만 포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시되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강대국의 태도가 도서 주민의 핵 알레르기들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방사능이 갖는 여러 피해에 대한 실질적 공포도 사라지면서 도서 국민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강대국의 태도였다. 태평양 비핵화의 움직임과 역내 내셔널리즘의 고양은 이 지역 주민의 강대국에 대한 불신감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²³⁾

1979년 유엔의 신탁통치령 속에서 자치정부를 발족시킨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헌법에는 영토·영해에서의 비핵이 조문화 되었다. 1981년 발족한 팔라우 공화국 헌법에도 비핵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헌법

22) 小林 泉, 前掲書, pp. 32-35.

23) 태평양 지역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지만, 2000년 발칸반도에서 벌어졌던 코소보 전쟁에 참가한 나토군 소속 군인들이 백혈병과 암 등으로 잇달아 숨지면서 유럽에는 ‘발칸 증후군’이 확산되었다. 그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는 이러한 발칸 증후군의 원인으로 미국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열화 우라늄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발로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대응에는 아래와 같은 속사정이 있다. 즉 유럽은 미국이 50여 년간 주도해 온 집단안전보장체제인 나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도의 ‘신속대응군’을 만들어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결국 나토관리 하에 두기로 하였다. 『동아일보』, 2001년 1월 6일 참조.

은 세계 최초의 비핵화헌법으로서 다른 국가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예외규정의 수속조항이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반해, 파라오는 직접 주민투표로 7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역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정국(施政國) 미국과의 정체(政體) 교섭이 순탄치 못하여 자치정부 수립이 다른 2개의 자치구보다 2년간 지체되었고, 신탁통치 종료 후의 정치관계인 자유연합협정의 체결도 대폭 늦어지게 되었다. 비키니 환초를 영토 내에 갖고 있는 마셜 군도 공화국 헌법에는 비핵 조항이 없다. 그러나 마셜 군도는 미국의 대변호사단을 초청하여 자치정부 및 피해주민과 공동으로 미국정부와 피해보상 획득교섭을 행하고 있다.²⁴⁾

도서국 정부가 반핵 행동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일반 주민에 의한 반핵 운동의 촉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지역강대국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인근 도서국가들과의 친선·우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도 작용하였다. 양국의 노동당은 1962년 프랑스가 모르로아 환초에서 핵실험을 행하기 위해서 태평양 실험센터를 설치했다는 정보를 얻는 등 남반구 비핵지대 구상을 통하여 이 지역의 비핵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1961년에 발효한 남극조약이 남극에서 핵폭발 시험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힘을 얻은 행동이었다. 도서국가 출신의 다수 유학생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행동이 이들 유학생들에게 미친 비핵 사상의 영향력은 커다란 것이었다.²⁵⁾

도서지역에서의 운동은 1969년 남태평양 대학이나 태평양 신학전문학교의 학생들이 모르로아의 핵실험 반대운동으로 피지의 수바에서 대규모 반핵 데모를 시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반핵 운동체인 ATOM(anti-testing on Mururoa)을 결성하고 태평양 교회회의와의 공

24) 김진호, 앞의 글, pp. 41-55.

25) Alexander Ronni, 『大きな夢と小さな島：太平洋島嶼國の非核化にみる新しい安全保障観』(東京：國際書院, 1992), pp. 103-155.

동 투쟁을 하면서 1975년 수바에서 '비핵 태평양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비핵 태평양을 위한 인민헌장'이 채택되었다. 1978년에는 미크로네시아의 폰페이 섬에서 제2회 비핵 태평양회의가 개최되어 제1회 회의에서의 인민헌장이 재확인되었다.²⁶⁾ 이것은 남태평양의 반핵 운동과 북반구 미크로네시아 반핵 운동이 연계되는 역사적인 성과였다. 주민 수준의 반핵 운동이 전 태평양 도서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의 역내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나 팔라우 공화국이 건국을 위하여 작성한 헌법 속에 비핵 조항이 첨가되어 있는 것도 1969년 이래의 주민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제국의 수뇌회의체인 남태평양 포럼은 발족과 동시에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표명을 분명히 하고, 2년 후인 1973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프랑스의 핵실험 정지를 요구하는 제소를 하였다. 이들 역내 제국 정부의 행동은 환경보호의 입장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하여 남태평양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일본이 마리아나 해구의 저준위 핵 폐기물을 시험 투기한다고 발표한 것은 1979년이다. 태평양 도서지역에 반핵 운동이 성행되고 있는 사실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정부는 예상외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놀란 일본 정부는 도리 없이 계획을 중지했다. 그 후 SPF의 공동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매년 핵 실험국 프랑스와 동일하게 일본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다. 나가소네(中曾根) 수상이 1985년 1월 오세아니아 방문에서 "역내국의 동의 없이 핵폐기물을 해양투기하지 않는다"²⁷⁾라고 선언하

26) 상게서.

27)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저준위 핵폐기물처리를 둘러싼 반대활동이 활발하게 대두되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해외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 1980년 동경 동쪽 800-2100킬로에 떨어진 4개 장소 중에 1개 지역을 택하여 저준위 핵 폐기물을 해양 투기하려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자마자, 『해양투기에 관한런던조약』(1972년)에 가입한 이상 이 조약의 규칙을 따를

게 된 것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부각되고 있었던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 비핵지대조약의 체결

일련의 비핵화운동 중에서 지역의 비핵화조약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의 탄생부터였다. 그래서 1985년 8월 쿡 제도에서 개최된 제16회 SPF에서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SPNFZT)이 채택되어 단번에 비핵화의 소리가 표면화되었다. 일명 ‘라로통가 조약’(Treaty of Rarotonga)으로 지칭되는 이 조약은 전문 16조와 다음 3개 항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 (1) 지역 내에 해외영토를 보유하는 나라는 영토 내에서의 핵폭발 장치의 제조, 배치, 실험을 금지한다.
- (2) 체약국은 조약체결국과 영내의 영토에 대해서 핵폭발 장치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
- (3) 체약국은 지역 내에 있어서 핵실험금지를 서약한다.²⁸⁾

태평양의 비핵화는 역내국이 일치 단결하여 추진해 온 활동이었다. 그러나 조약의 성립까지는 역내국 간에 약간의 의견대립이 발생하였다. 당초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는 이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고, 파

의무가 있던 것이다. 1980년 4월 8일 일본은 동 조약을 비준하여 1981년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할 작정이었다. 그러자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맹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우루와 키리바시 등은 런던조약의 가맹국으로서 활발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일시적인 ‘모라토리움’을 설정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의 과학기술청은 해양투기에 관한 기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28) 이 의정서의 (1)항은 핵 보유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2), (3)항에 따라서는 상기 3국 이외 소련과 중국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푸아누기니는 조인은 했지만 비준 행위는 보류했다. 그 이유는 조약 제5조 “체약국은 외국의 선박·항공기의 기항, 외국항공기의 자국 영내 통과, 외국 선박의 자국 영내 무해(無害) 항행의 불허용도 주권적 권리행사를 보유한다”라는 조문을 ‘전면 금지’로 명기하는 것이 ‘비핵’이라는 중심용어를 강조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²⁹⁾ 본 건은 1986년의 SPF 수바회의에서도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여기서는 바누아투가 조약강화의 수정을 제안했으나 현실적 제1보를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타국의 의견에 압도되어 수정안은 각하되었다. 부속의 정서에는 “국익을 손상하는 예기치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탈퇴조항이 새롭게 첨가되었다.³⁰⁾ 그것은 완벽한 조문에서도 핵 보유국의 조인을 받아내지 못하면 조약은 공동화(空洞化)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외적 국가가 있었다. 그것은 역내 유일한 왕국(王國)인 통가였다. 통가는 역내 비핵화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에서 조인을 거부했다. SPF 등 역내협조·협력 조직 내의 여러 행동에서 통가는 항상 특이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특히 핵에 관한 튀보우(King Taufa'ahau Tupou IV) 4세의 개인적 사상은 역내 국가 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튀보우 왕은 핵실험이나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반대이지만,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핵 규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방사성이 낮은 저준위 핵 폐기물 투기에 관해서도 관대하였고, 또한 과학적으로 안정도가 높으면 영토내의 무인도를 투기장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튀보우 왕과 유사하지만, 진일보한 인물은 마샬 군도 공화국의 추장 출신인 카부아(Ama-ta Kabua) 대통령이었다. 신탁통치령내의 자치국이었던 1983년 영토 내 이미 핵 오염이 진행되고 있었던 비키니 환초를 일본의 핵 폐기장으로 제공한다는 발언³¹⁾이 있자 다른 태평양

29) 小林 泉, 전거서, pp. 33-45.

30) 상거서..

31) 특히 1995년 마셜군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특히 당시 필립 밀러 의

제국의 맹렬한 반발을 받았다.³²⁾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역내국의 강한 비핵화 의지에 의해서 '라로통가 조약'은 채택되었다. 이때 소련과 중국은 호의적인 반응을, 미국과 영국은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핵실험을 속행하고 있던 프랑스는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소련과 중국이 조약의 의의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하면서 조인한 데 대하여, 서방측의 핵 보유국의 조인이 없는 상태로 1986년 12월 조약이 발효되었다. 수바회담 결정은 비핵 강경파가 주장하는 완전 비핵화 구상의 후퇴였다. 이 조약 내용은 바누아투와 솔로몬의 지적 외에도 비핵지대가 남반구만으로 설정돼 미크로네시아가 포함되지 않은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조약의 최대의 목적은 프랑스의 역내 핵실험을 정지시키고 지속적으로 역내의 핵무기를 배출시켰기 때문에 소국가군의 어필로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비핵화구상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실현을 본 것은 남극조약과 중남미 14개국에 의한 '트라텔로코 조약'(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Treaty of Tlatelolco)이다. '라로통가 조약' 발효 1년 후인 1987년 12월에 개최된 ASEAN 수석회의의 비핵화선언구상도 남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을

무장관은 1994년 말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키니 환초의 핵폐기물저장소 건립타당성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마셜군도를 논쟁의 도가 니로 몰아 넣었는데 1995년 5월에 비키니 지방의회는 이를 기각했다. 비키니는 미국이 1940-50년대에 실시한 23차례의 핵실험으로 완전히 오염되었으며, 약 200명에 달했던 주민들은 1948년 핵실험 이전에 모두 외지로 이주했는데 지금은 주로 남쪽 킬리 환초에 모여 살고 있다. 비키니 환초에 핵폐기물저장소를 세우고자했던 마셜군도 정부의 의도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 마셜군도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의 시한은 2001년으로 이 협정이 종결되면 재정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마셜군도 정부예산(1995년 기준) 8,500만 달러 중 미국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나 된다.

32) 상계서.

강하게 받은 것이다. 태평양의 비핵화는 강대국의 군사전략상의 불이익으로 위기감을 부를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비핵화의 방향은 초강대국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³³⁾ 급기야 냉전구조가 붕괴하여 버린 지금은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강대국과의 연대

오스트레일리아와 동시에 또 하나의 역내 대국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 정권이 출범한 1984년부터 비핵화 정책이 급진전되었다. 당시 랑게(David Lange) 정권은 핵무기 금지법제화와 국내 핵무기 제출을 공약했다. 1986년 핵불탑재(核不搭載)의 확증이 없으면 기항 불인정을 미국에 통고하고 또 다시 1987년 6월 공약에서 국내 전 국토의 비핵화 법인 「뉴질랜드 비핵지대·군축관리법」을 성립시켰다. 이 결정에서 195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태평양에 있어서 안전보장의 요체였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의 3국에 의한 군사동맹기구인 『태평양안전보장조약기구』(ANZUS)가 사실 상 붕괴되면서 이 지역의 동맹관계를 재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즉시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군사협력관계 강화를 확고히 하였지만 미국에 의한 태평양 군사전략의 종언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³⁴⁾

뉴질랜드의 결단은 미국 산하에 있는 서방측의 일원으로서 태평양의 전략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태평양 지역국가로서의 주체성을 우선한 결과였다. 이 지역의 도서국가들은 뉴질랜드의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라로통가 조약의 실천을 위하여 우선 비핵 정책을 관철시킨 것을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뉴질랜드 노동당의 비핵화 구상은 도서국가의 소리를 대표했다. 그리고 랑게 수상은

33) 이철기,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1997), pp. 34-35.

34) Ronald D. McLaurin and Moon Chung-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Seoul: Kyungnam Univ., Press, 1989), pp. 205-275.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논문 속에서 비핵화에 공지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비핵화는 태평양의 핵 확산을 방지하고 미·소의 적대적 핵 무기 경쟁에 말려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남태평양은 세계 분쟁지대에서 떨어져 있고, 전략적 위치도 서유럽이나 동북아시아와는 다르다. 따라서 대소(對蘇) 전략상의 입장에서만 이 지역을 바라보는 미국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이익과 안전을 지역의 자주성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비핵 정책은 결코 서방측의 안전을 손상하지도 않고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역 안전은 지역방위의 자주적인 노력이다. 닉슨 독트린의 정신에 기반을 둔 이 방법이 금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⁵⁾

랑게 노동당 정권 출현 이전 약 9년 간 여당이었던 국민당은 ANZUS를 붕괴시킬 것 같은 급진적 정책을 표방하는 랑게 정권은 “단순하다”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 해 선거에서도 랑게의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노동당 정권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랑게 은퇴 후에 치러진 1990년 10월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참패하고 5년 만에 국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동당의 패인은 고복지정책과 목축농업을 주로 하는 경제개혁 실패와 뉴질랜드 장기적인 경제하락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 랑게를 뒤이은 볼거(Jim Bolger) 수상도 비핵 정책의 견지를 표명하여서 정권이 바뀌어도 비핵 정책이 후퇴할 염려는 없었다.

비핵에 관해서 뉴질랜드가 시사한 역내국가로서의 자세는 도서국가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미관계를 고려하여 뉴질랜드처럼 강력한 연대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내 도서국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자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이

35) 小林 泉, 前掲書, pp. 37-38에서 재인용.

지역의 비핵화 정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핵 보유국이 도서국들의 비핵 호소를 무시 할 수 없는 것은 선진 그룹의 측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태평양의 최소국들과 공동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아니아 도서국가들의 자주노선은 핵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 핵 공포감은 물론이지만 그들이 주체성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에 있다. 그 배경으로는 도서국을 무시하여 지속해 온 강대국의 태도에 반발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다. 오늘날 국제관계는 상호의존과 상호협력의 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일방에서는 상호감시의 관계에 있다. 그 때문에 도서국의 목소리를 초강대국도 말살시킬 수 없는 국제환경이 출현하고 있다.

1990년 11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주도하에 열린 '하와이 도서국 수뇌회의'도 그러한 초강대국의 우려를 나타내는 표시였다. 여기에서는 부시 대통령은 1990년대 미국의 대도서국 정책을 피력하고 각 국 정상과의 이해를 요구함과 동시에 지역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³⁶⁾ 부시의 본 뜻은 화학무기 처분에 관해서 도서국가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구 서독에 배치돼 있던 화학무기를 냉전이 종료되면서 존스톤 환초에 폐기 처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면서 또 태평양을 쓰레기 처리장 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도서국가의 반발을 야기했다. 존스톤은 미국 해군의 직할지역으로서 현재 기지화 되어 있는 섬이었다. 1971년에도 오키나와에 배치된 구식 화학무기가 여기서 처분되어 그 설비는 지금도 사용되었고 당시까지 이런 일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서국 정상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현재의 화학물질 처리시설의 사용을 용인하는 대신에, 새로운 시설확대로 인한 화학물질의 진입을 단념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동시에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 받았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도서국가들을 국제정치의 주체로서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상계서, p. 39

IV. 일본 지자체의 평화운동과 ‘無防備 地域’ 운동

지금까지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을 예로 들어 생태적 안전보장의 논리를 전개해 왔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지역의 국제화’ 또는 ‘지역의 평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단순한 국제교류 수준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국제정책을 갖고 정책전환은 물론 새롭게는 직접 외국인,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등과의 소위 ‘지자체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³⁷⁾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경제적인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그에 걸맞는 국제적인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은 ‘민간 외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평화애호국가로서의 일본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자체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지자체의 노력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평화운동에 기반을 둔 ‘무방비지역’ 운동이다.³⁸⁾

1. 무방비지역 개념

‘무방비지역’(Nondefended Localities)이란 소위 비무장 중립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인도법인 1977년의 『제네바 조약 추가 제일의정서』(1949년 8월 12일 제네바 제조약에 추가된 국제적 무력 분쟁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일의정서)의 제5장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역 및 지대」의 하나로서,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 4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吉田新一郎(編譯), Chadwick F. Alger(著), 『地域からの國際化』(東京: 日本評論社, 1992); 大津浩, “自治體外交の法理,” 大津浩(外編), 『自治體外交の挑戦』(東京: 有信堂, 1994), pp. 39-56.

38) 吉田善明, 『地域からの平和と自治』(東京: 日本評論社, 1985), pp. 11-22.

- ① 모든 전투원, 이동병기, 이동군용설비가 철거되어 있을 것.
- ② 고정된 군용의 시설, 영조물(營造物)이 적대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
- ③ 당국 또는 주민 등에 의한 적대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을 것.
- ④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행하여지지 않을 것.

위의 4개 조항을 충족시키는 한, 무방비지역을 공격하는 행위는 '수단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 (제59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에 의한 동 지역에 대한 공격은 동 의정서 제85조에 의거하여 '전쟁범죄로 간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59조에 따르면, 무방비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쟁당사국이 아닌 '적당한 당국' (Appropriate Authorities)을 설정할 경우, '적당한 당국' 이 일방적으로 무방비지역을 선언하여 상대국에 통고한다. 상대국은 그 영역을 통보 받아서 4개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무방비지역으로 취급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분쟁당사국의 국가 자신이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4 개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대국과의 결정으로 무방비지역을 선포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방비지역의 경계를 명백히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전자의 경우는 지자체 당국이나 의회·주민으로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무방비지역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핵심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비핵이라는 지자체 운동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국제법에서 언급되는 평시(平時)와 전시(戰時) 대책에 대해서는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국방은 정부의 전결사항이지만, 일본 지자체들은 국방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위협이 닥쳐서 지역주민의 생사여부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야말로 주민의 안전을 오로지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즉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핵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지자체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비핵 도시 선언과 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핵문제에 대해서 국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일본 지자체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방문제는 지자체의 권한 밖인가? 지자체가 처리하지 못하는 사무를 명기한 일본 「지방자치법」 제3조 10항에는 방위에 관한 사무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핵 문제나 전쟁피해 등과 같은 국방 분야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주민의 안전·건강·복지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즉 국방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안전·건강·복지 등을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이다.³⁹⁾ 이런 관점에서, 해당 지자체 의회가 이러한 평화정책을 작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무방비지역 운동은 운동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지만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비핵 지자체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 운동이 유력한 수단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시켜 참가시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여하히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자체에 의한 '무방비지역'의 선언은 즉, 전쟁비협력선언이다. 이것이 일반주민보호 때문에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보장되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생명, 재산, 향토를 전화(戰禍)로부터 수호하도록 주민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인도법의 무방비지역 조항의 규정은 지자체의 평화정책을 연구할 경우에 크게 활용해야 할 분야⁴⁰⁾이다.

39) Ibid., pp. 28-30.

40) 프랑스의 빠리, 이태리의 로마, 피렌체, 베네체아 등은 '무방비지역'을 선언하여, 전화를 면하였다. 일본에서는 전화를 면한 오끼나와(沖縄)의 도가부(渡嘉敷)村에 있는 마에지마(前島)의 경우가 있다(琉球(琉球)新聞, 1981년 6월 19일 참조). 또한, 교토, 나라, 또는 하이델베르크 등과 같이 공격축이 폭격을 중지함

2. '무방비지역'의 조항활용: 자유도시와 비핵·평화정책

역사상으로 자립된 도시는 현재와 같은 대학을 설립하고, 자본가의 자산사업이었던 사회보장을 사회사업으로 정착시켰다. 삼권분립을 시발로 근대정치의 기초가 되는 혁명적인 운동 등은 이러한 자립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여 온 원동력으로서 지역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야말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일본 도시들이 지향하고 있는 비핵 지자체와 평화도시의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비핵 지자체 운동은 소위 '고오베(神戸) 방식'⁴¹⁾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운동 목표를 지자체 정책으로 전환시켜 보다 확고하고 항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래의 지역운동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0~70년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비군사화와 같은 운동을 전개해왔다. 오키나와 복귀운동⁴²⁾처럼 대단히 혁

에 따라서, 전화를 면한 예도 있다. 그러나 무방비지역의 규정에는 상대에 맡기지 않고 있다. 서로의 확인 또는 합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상대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여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 더욱이, 무방비지역으로서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군의 위반행위를 전쟁범죄로 금지하고 있다.

41) 생태적 안전보장의 개념은 지자체 차원의 평화운동과 시민운동과 연계될 때 더욱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 때 일본은 '비핵 3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적재한 함선이나 잠수함이 공공연하게 항구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1975년 고베 시의회는 '비핵법령'을 채택하여 "핵무기를 적재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내지 않는 선박은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령 채택 이후 미국 함선은 한 척도 입항되지 않았다. 이런 '고베 방식'의 시발은 핵무기 입항을 보고 놀란 고베시의 항만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고베 방식'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시민 스스로 일어선 생태적 안전보장의 시도라고 할 것이다.

42) 따라서 오키나와 전후사는 자치제도의 획득, 인권보장의 확충, 자립경제의

신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오늘날의 비핵 지자체 운동은 핵 피해만을 염두에 두는 운동은 아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힘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자는 운동이다. 핵 피해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내외로 확산시켜 핵 폐기를 실현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80년대 들어서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특히 이런 운동의 국제적 확산은 일본헌법 그리고 1978년 유엔 결의 「평화적 생존의 사회적 준비에 관한 선언」에 있는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한 투쟁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비핵 지자체 국제회의」의 결의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岐)가 주최한 「세계평화연대도시 시장회의」의 파급효과를 보면, 일본이 평화애호국가라는 이미지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선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운동은 오랜 세월 피폭국으로서 중앙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그 당시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세계평화연대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하여 평화도시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일본 비핵 지자체의 평화정책은 그간 국가만이 전유물이었던 국방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변화된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비핵 지자체 운동은 시작일 뿐 그 이념이 명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세계평화연대도시 시장회의」에서 비핵 평화도시라는 운동이념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 민중은 국가나 국가연합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핵 군축을 시도하

발전을 요구하는 투쟁의 역사였다. 이러한 오끼나와 주민들의 일본 본토에 대한 투쟁은 크게 7개 시기로 나누고 있다. 제1기(1945-1950)의 독립론, 제2기(1950-1960)의 일본복귀론, 제3기(1960-1968)의 조국복귀론, 제4기(1968-1972)의 반복귀론·특별자치제도론, 제5기(1972-1978)의 개발청 자치저해론, 제6기(1979-1990)의 개발청·현 협조론, 제7기(1990-)의 개발체제 주시론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島袋 純, “戰後の沖縄の政治と行政”, 제1회 세계 섬학회 세미나 발표 논문(1997)를 참조할 것.

려는 「핵 관리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자신들의 손이 미치는 지역공동체(비핵공동체=평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부터 국경을 넘어서 도시와 도시, 시민과 시민 등의 연대운동에 의하여 비핵 세계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자립된 자유도시가 시의회와 시민이 일체가 되어 새로운 근대사회를 개척한 것처럼, 오늘날 비핵·평화를 지향하는 민중운동과 지자체의 운동(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류사회를 모색하려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 지자체 운동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새로운 운동이다. 오늘날 미·소의 INF전폐 합의나 뉴질랜드의 비핵 지자체 운동은 NGO, 비동맹, 여러 의회에서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무방비지역' 운동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한 하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 일본 지역의 사례

1) 天理: '비핵·무방비·평화도시조례'의 구상

천리시 노동조합협의회의 직접 청구로 제정을 요청한 '비핵·무방비평화도시조례안'은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로의 길을 논의한 전문과 연관시키면서 제1조에서 제3조까지가 비핵·평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조항이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전시 또는 그 위험이 명백할 때", 천리시가 제네바조약에 추가된 제1의정서 제59조에 의거하여 무방비지역을 선언하여 전쟁으로부터 이탈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는데, 이 조례 안에 나타난 비핵·비전의 구상은 평시에 천리시가 비핵·평화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노력이 실효를 얻지 못하여 불행하게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때는 국제조약을 활용하여 전쟁에는 참여치 않고 이탈하여 끝까지 지역주민의 생활을 전화로부터 수호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천리시의 무방비지역 운동도 지역의 비군사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전쟁을 회피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말하자면 무방비지역 조항을 활용한 非戰운동인 것이다. 이런 것은, 일견 소극적으로 전화로부터 향토와 주민을 수호하는 운동 이상의 것이다.

무방비지역 선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천리시 주민들의 지역 비군사화를 포함하는 평화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불가결하고, 이러한 부단한 노력이 전쟁의 시발을 멀리 하게 한다. 실제적으로, 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태세를 평시부터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또한 주민의 지혜를 결집시키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한 운동이다. 헌법과 제일의정서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운동의 무기로 하여,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자각과 욕구를 배경으로, 주민·지자체 등의 주권자의 의식·지자체의 의식 등의 활성화를 측정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견제·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다.

지금까지의 지역비군사화 운동과 다른 점은, 국제조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지역 지자체의 차원에서부터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비군사화 운동은 정부의 방위논의 공세나 소련의 위협론 등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정체기미에서 많은 국민은 정부의 군 확장 전시체제 조성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무방비지역 운동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여 지역의 비군사화운동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천리시 노동조합협의회가 작성한 조례 안에 나타났듯이, 비핵·비전의 결의와 자세를 명백히 한 지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의 군 확장 정책, 또는 지자체를 수족과 같이 사용하려는 전시체제조성을 잘 견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포위망에서는 기지는 고립화되어 기

지를 관장하는 지자체도 영향을 받게 되어 결국은 기지 자체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2) 오키나와: 국제자유도시 구상

오키나와⁴³⁾는 일본 최남단에 있는 약 161개의 섬으로 된 해양 현(縣)으로,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 북쪽으로 일본 본토와 한반도, 서쪽으로 중국대륙, 남쪽으로는 아시아 여러 나라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주목하고 일찍부터 일본은 전국종합개발계획(1987. 6)에 오키나와를 “일본의 남서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한 여러 나라의 교류거점 형성을 도모한다”고 반영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키나와는 1997년을 ‘새 오키나와 창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⁴⁴⁾

43) 오키나와는 14~16세기에 중국, 동남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교류거점이 되어 번영을 누렸는데 그 “琉球의 大交易 時代”를 되살리자는 것이 오타지사의 미래비전이라는 것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후의 ‘기지의존형’, 오늘의 ‘국고의존형’(북극 시점에서 제정의존도 23.4%, 1992년 의존도 29.8%로 높아졌음)에서 앞으로 자립형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탈기지, 탈제정의존’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산업창조계획의 기본이념은 ‘복지의 섬’이다. 첫째, 장수의 섬 오키나와의 지혜를 약초 및 제약원료의 산지로 육성하기 위해 약초류 성분분석기구 정비, 약용식물 생산유통 등 조사, 약초재배 실증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따뜻한 날씨와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여 ‘장수촌’을 만들자는 구상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무농약 야채,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고령화 해 가는 일본 전국의 고령 인구 1천 8백만 인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도의 정보관련 산업이며 셋째, 관광개발을 위해 아크아 폴리스를 나하 신항 머리에 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4) 오키나와는 섬 전체를 관세면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관세의 권한을 오키나와현이 행사하는 ‘1국 2제도’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사진으로는 2002~2010년 의 시기에 특별제정법에 의거하여 ‘특별 현제’를 도입하고 ‘지역주권’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광역연합회의’를 매개로 오키나와가 이 지역의 거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島袋邦・比

일본 복귀 25주년을 맞아 오키나와가 야심적으로 펼치는 '새 오키나와 창조'의 전제조건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미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되었고 오타(大田)지사는 미군기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여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의 극동 방어체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냉전이 끝나고 '대립에서 공존'으로 바뀐 새 시대에 맞추어 오키나와 역시 군사전략의 요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요충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다.⁴⁵⁾

미군기지가 없는 오키나와의 미래를 향한 중심 프로젝트는 4년 동안의 연구검토를 거쳐 1996년 11월 지사의 결재가 난 '국제도시 형성 구상'이다. 21세기를 향한 이 구상은 오키나와를 동아시아에서 사람·물자·금융·정보의 교류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평화·공존·자립'을 기본이념으로 삼아 자유무역지대 확충, 국제정보·금융도시·국제컨벤션 유치와 관광리조트, 오키나와 교민의 네트워크 등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 위치는 후텐마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던 오키나와 섬의 중심지역으로 오키나와의 거점이 된다.

이를 위해 육·해·공 교통망을 정비하는 '종합교통체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那覇 항만을 허브(基軸)항으로 만들어 국제 물류의 거점이 될 자유무역지역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관심은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싱가포르, 홍콩 및 대만 무역의 거점인 카오슝(高雄), 미 해군기지에서 공업무역항으로 탈바꿈한 필리핀의 수빅 만, 미얀마와 베트남의 자유무역지역 등에 미친다. 국제항공노선도 현재 서울, 타이베이, 홍콩의 3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북경·상해·하노이·마닐라·괌 등으로 확장하고 초고속여객선을 도입

嘉良充, 『地域からの国際交流: アジア太平洋時代と沖縄』(東京: 研文出版, 1986); 平良朝男, 『日本の一國二制度: 沖縄 国際自由都市・フリーポートに』(東京: 本の泉社, 1998).

45) 장원석·김진호·고성준, "도서지역의 주민운동: 하와이, 오키나와, 제주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집(1999).

하여 국제 쇼핑몰을 만들고 그 중에도 모노레일 착공계획이 주목된다.

아·태지역의 정보통신 허브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특구 구상'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5년 정도의 연구기간에 총 사업비 4백억 엔을 투입할 이 사업은 대학·현정 우체국 등을 연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미국 등 주변 국가들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NTT·KDD·NHK 등 민간대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국제도시, 자유무역지역 또는 정보통신시설 등의 인프라는 돈과 시간을 투입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활용할 인재·소프트웨어·기업인 등 인적자원은 하루아침에 육성할 수 없다. 인재육성을 위해 日美연합대학원대학·관광종합대학 등의 유치·설치, 해양심층수연구소·국제평화연구소·아열대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 설치를 비롯, 어학연수원도 강조된다.

국제도시 형성 구상과 관련하여 관광리조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유치계획에도 적극적이다. 1996년 12월 26개국 6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한 '동아시아 사회보장 담당 각료회의'(복지서밋), 1998년 아·태 경제협력회의(APEC)에너지 담당각료회의 개최, 2000년에는 오키나와에서 선진 7개국 수뇌회의 유치를 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관광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하고 항공요금을 인하하려는 계획도 있다. APEC관련기관의 유치나 APEC연구센터 설립 등의 계획도 주목된다.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현의 해외사무소 또는 위촉주재원을 확대한다. 오키나와현은 이미 아시아의 물류·금융·정보의 중추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롯, 타이베이와 서울에 주재사무소를 두었고 중국 복건성 복주시에는 오키나와·복건 우호회관을 건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팔라렘푸르와 마닐라에 위촉주재원을 두었다. 방콕 자카르타·하노이에 위촉주재원을 둘 계획이어서 아시아지역에 배치한 오키나와현의 거점은 1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상과 같은 '새 오키나와 창조'의 설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올해 배정한 예산은 총 5천억 엔으로 여기에는 자유무역지역 확충에 관한

조사비, 후텐마 미군기지 터를 이용하기 위한 조사비 등 새 오키나와 진흥의 경비가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 오타 지사는 이번 예산을 두고 '새 오키나와를 창조하는 원년의 예산'이라고 논평했다. 제주와 함께 동아시아 관광의 고리가 될 오키나와가 21세기를 향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새오키나와 창조' 설계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삼택도(三宅島)

일본에서 내발적 안전보장의 또 하나의 예는 삼택도의 '관민공용 공항유치 및 건설에 반대하는 모임'(반대하는 모임)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84년 2월에 시작했지만 그 시초는 1983년 10월에 25억엔 정도의 피해를 가져다준 화산분화 직후 시민과 상담도 하지 않고 자민당 촌의회 의원이 미군의 '야간발착(發着)훈련공항'(NLP) 설치안을 나카소네(中曾根) 당시 수상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동 공항을 삼택도에 유치하자는 것에서부터 촉발되었다.

동경도의 남남서 약 180킬로, 伊豆七島の 중앙에 위치하는 삼택도는 섬 주위가 38.85km 정도 되는 적은 화산섬이다. 이 섬은 인구 약 4,300명 정도이고 강수량도 적당하여 푸른 숲이 풍부한 섬이다. 그래서 섬사람들의 생활은 이러한 자연환경과의 공존을 통하여 영위하고 있었다. 삼택도는 일본 3대 어장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뭇가시리 등의 해초도 많고 농업도 할 수 있는 섬이다. 따라서 삼택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어떠한 계획도 상술한 태평양의 섬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민 생활 기반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NLP공항 계획은 일본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삼택도 주민들의 생활을 뒤바꿔게끔 하는 것이다. 즉 NLP라는 항공합재기의 발착훈련을 위한 공항건설은 소음공해와 건설 그 자체가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업과 농업으로 의지하여 온 섬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형 리조트개발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공항유치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자민당의 '공항유치파' 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삼택도 주민들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주민들처럼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하였다. 공항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해온 결과, 공항 계획은 지금까지는 중단되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언제 재개되느냐 여부는 미정인 상태로 섬사람의 생활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섬에 한정시키지 않고 시각을 달리해서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안전보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본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NLP 공항은 일본의 어느 지역에 건설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 전체의 안보라는 틀에서 생각하면 섬사람들의 인식을 개조시켜 공항건설을 강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섬의 경제발전은 강압 당하게 되는 운명이 된다. 이러한 외발적 안전보장의 논리에 대응하여 삼택도 주민들은 섬을 보호하겠다는 생태적 논리를 운동으로 발전시켜 NLP 공항을 다른 섬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안보조약 그 자체에 대한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회의(懷疑)를 갖게 하는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생태적 안전보장의 핵심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삼택도 주민운동은 공항 건설을 중지 시켰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미국의 군사예산 삭감이나 일본정부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외교와 내정의 요소가 있었다. 태평양의 도서국가가 세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주변에 위치하는 삼택도가 일본정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핵 주위에 근간을 두는 안전보장 원칙에 입각한 국제관계에서 삼택도와 같은 섬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는 지금도 불투명하다.

V. 결 론

태평양에는 세계지도에서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작은 섬들이 무수히 산재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 지역 섬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해 왔다. 문명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마치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구밀도도 낮은 도서라는 점에서 세계인의 특별한 주목대상의 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21세기 문명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태평양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명도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구촌 사회에서 최소국인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존재와 입지 또한 크게 달라지면서 국제적 관심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편으로는 냉전 종언 이후 경제협조나 지역통합화가 모색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심력을 잃은 구 사회주의 제국이나 의제적 국민국가의 내부의 민족 재통합의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도도한 흐름이 태평양 도서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전적으로 강대국간의 역학관계만으로 규정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국제감시와 협조의 밑에서 무역관계, 환경보존, 인권문제 등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수적으로 우월한 소국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적 안전보장은 태평양의 도서국가의 비핵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여 왔다. 태평양에서 생태적 안전보장론은 도서국이 주체가 되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주의를 세계 시스템 속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안전보장론은 도서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또는 지역 시민운동에도 조심스럽게 적용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에서 안전보장론상의—상호방위조약에서 기지설치와 핵 시설물 설치—민감한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자체가 떠맡음으로써 외국정부와의 협상도 보다 용이해지게 되었다. 생태적 안전보장론에서 안전보장의 주체는 역시 국가이

다. 자국의 국경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주의가 가져온 아이러니는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의 지역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생태적 안전보장론은 단지 환경보호나 환경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핵 평화주의 운동과 같은 지구적인 차원과 지역차원의 행동을 포함하는 것도 생태적 안전보장의 시도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주제를 제주도의 평화의 섬과 연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⁴⁶⁾

세계화로 각 지역은 국가의 보호 울타리를 넘어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국제·지역 간 상호의존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교통·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지방자치단체와 NGO는 다양한 국제교류를 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제 교류의 경쟁단위이자 비교단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지역 간 협력·경쟁의 시대에 제주가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역사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갖는 미래형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상징적 국제공간의 창출이 요청되고, 이의 전략으로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12월에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에는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⁴⁷⁾고 규정되어 있다.

평화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평화와

46) 고충석·김부찬·김진호·송재호·양덕순,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0-10(2000); 김진호,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념으로서 평화의 섬,”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11집(2001), pp. 267-272.

47)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12 공포) 제52조 참조.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전되는 진정한 발전 상태로 보는 적극적 평화로 구분된다.⁴⁸⁾ 하지만 이런 평화의 개념을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지역의 발전전략으로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제주발전상에 차지하는 역할이 파악되어야 한다.

첫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개발의 기본 정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평화의 개념은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이 없이 조화로움이 구현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우름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과 중앙 그리고 세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 도민간의 역기능적 갈등이 극복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현 등으로 제주발전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의 지정학적 이점과 평화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제주를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하나의 포지션 실천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평화의 개념은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익의 극대화가 달성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제주도가 단순한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신뢰구축을 위한 평화회담 장소로서,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공헌하려는 시민수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의 섬'은 결코 '노 비자(No Visa)'

48) 박주식, "탈현실주의 평화학," 『평화 연구: 이론과 실제』, 유엔 세계평화의 해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1996. 6), p. 1.

등을 통해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극대화시키려는 관광진흥 수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의 섬'의 기본 전제는 제주를 비무장·비군사지대화 시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연구, 훈련의 중심지로 제주를 부상시키려는 시민수준의 노력을 의미한다. 평화란 비군사화를 넘어서 균형 된 발전을 토대로 하여 이룩되는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와 사회복지의 실현을 통해서 계층 간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정의로운 인간공동체의 구현이야말로 '평화의 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째는 지정학적 이유이다. 제주도민이 일심 단결하여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동북아 군사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군축협상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한국의 공세형 무기의 후방배치, 포스트 필리핀 이후의 미 태평양 전력의 전진배치 등은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평화의 섬' 선언은 바람직하다. 둘째로 제주도의 문화·역사적 전통과 유산이다. 제주의 '삼무정신'(三無精神)은 평화의 가장 원초적 전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복원한다는 점에서도 '평화의 섬' 구상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⁴⁹⁾ 더욱 중요한 것은 '4·3사건'이란 역사

49)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유배와 고립의 섬'으로 알려져 있었다. 섬의 위치는 본토의 다른 왕조에 의해 제주를 유배와 추방의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의 선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앙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후 섬에 유배된 고위층이라는 사실이 제주도의 특징을 보여준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치욕적인 농담은 제주가 오랫동안 외지고 척박하고 잊혀진 땅으로 대우받아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주가 본토의 관심을 끌기 시작 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1960년대 이후, 국가 전체를 휩쓸던 근대화의 영향은 제주에 도달했다. 통신과 운송체계의 확산은 제주를 본토와 가깝게 만들었다. 전체적인 근대화 과정은 외지고 자기 독립적인 농업사회를 관광과 고도 발전의 섬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다. 제주의 빼어난 풍광은 제주가 '아시아의 진주', '신혼부부의 꿈의 섬', '아시아의

적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평화의 섬' 구상은 당위론적인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 제주사회의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제주도의 내생적 개발과 관련, 평화추구적인 제주지역개발의 모형과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제로서도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고충석·김부찬·김진호·송재호·양덕순(2000),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0-10.
- 김진호(역, 1995), M. Handel(저), 『약소국 생존론』, 서울: 대왕사.
- 김진호(2001),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념으로서 평화의 섬,"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11집.
- 김진호(1996), "태평양 도서국가의 국제관계: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기구를 통한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제주대 동아시아연구논총』, 제7집.

하와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외지인에 의한 대규모 투기와 섬 본래의 문화와 규범의 파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러한 근대화의 상반된 두 과정은 섬 주민들간에 그리고 섬 주민과 외지인들간에 제주발전의 방향과 자연에 대한 논쟁을 새롭게 하였고 그것이 제주를 분열화 된 사회로 바꾸었다. 이러한 대립에서 제주인들은 다소 방어적이고 외지인 혐오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국면이 다가왔고 이것은 제주인의 편협 된 세계관을 깨뜨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1991년 4월 노태우·고르바초프의 제주정상회담이었다. 제주인들은 알타, 포츠담, 특히 알타의 연장선에서 제주의 국제적인 초점에 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제주의 국제화는 제주인에게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다. 주어진 관광자산으로 인하여 제주인들은 경제적 전망에서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함으로써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는 생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다.

- 김진호(2000), 『홍콩발전의 국제정치경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주는 함의』,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태현(역, 1995), Barry Buzan(저),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 서울: 나남.
- 박대원(역, 1988), 피에르 르누벵(저), 『동아시아외교사』, 서울: 서문당.
- 박주식(1996), “탈현실주의 평화학,” 『평화 연구: 이론과 실제』, 유엔 세계평화의 해 10주년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1996.
- 백진현(1995), “환경의 국제정치,” 김달중·박상섭·황병무(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나남.
- 이철기(1997),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 이해찬(역, 1994), Gareth Porter, Janet Welsh Brown(공저), 『세계환경정치: 그린라운드란 무엇인가』, 서울: 돌베개.
- 이화수(1994), “생태사회과학: 쟁점과 접근,”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생태사회과학: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 수원: 아주대학교 출판부.
- 장원석·김진호·고성준(1999), “도서지역의 주민운동: 하와이, 오키나와, 제주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집.
- 현인택·김성한(2000겨울/2001 봄), “인간안보와 한국외교,” 『IRI리뷰』, 제5권 제1호.
- Alexander Ronni(1992), 『大きな夢と小さな島: 太平洋島嶼國の非核化にみる新しい安全保障観』, 東京: 國際書院.
- 吉田善明(1985), 『地域からの平和と自治』, 東京: 日本評論社.
- 吉田新一郎(1992, 編譯), Chadwick F. Alger(著), 『地域からの國際化』, 東京: 日本評論社.
- 大津浩(1994), “自治體外交の法理,” 大津浩(外編), 『自治體外交の挑戰』, 東京: 有信堂.
- 島袋 純(1997), “戰後の沖繩の政治と行政,” 제1회 세계 섬학회 세미나 발표 논문.
- 島袋邦·比嘉良充(1986), 『地域からの國際交流: アジア太平洋時代と沖繩』, 東京: 研文出版.
- 邊度昭夫(1992), 『アジア・太平洋の國際關係と日本』, 東京: 東京大出版部.
- 小林 泉(1996), 『太平洋島嶼諸國論』, 東京: 東信堂.

信夫隆司(1999), “開發と環境の國際政治理論,” 信夫隆司(編), 『環境と開發の國際政治』, 東京: 南窓社.

平良朝男(1998), 『日本の一國二制度: 沖縄 國際自由都市・フリーポートに』, 東京: 本の泉社.

Patricia M. Mische(1989), “Ecological Security and the Need to Reconceptualize Sovereignty,” *Alternatives*, Vol. 14, No. 4, October.

Robin Cohen(1987), “An Academic Perspective,” Colin Clarke and Tony Payne(ed.), *Politics, Security and Development in Small States*, London: Allen & Unwin.

Ronald D. McLaurin and Moon Chung-in(1989),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Seoul: Kyungnam Univ., Press.

Sheila Harden(1985, ed.), *Small is Dangerous*, New York: St. Martin's Press.

South Pacific Island State's Ecological Security

-The Lessons for Local Government's Nondefended

Localities in Japan-

Kim Jinho

Abstracts

The nuclearism started to influence the South Pacific area in 1944. The U.S. armed Forces built on air base in Tenian Island of the South Pacific Ocean and used it for atomic bombs to Hiroshima and Nagasaki that was decisive in ending of the Pacific War. In Aug. 8, 1985 - passing 40 years after the Hiroshima's explosion - the member nations of the South Pacific Forum (SPF) signed the non-nuclear treaty of their area. This treaty contains three attached protocols and the text of an agreement. 11 countries among 13 countries of the SPF ratified the treaty as of March, 1990. But what a interested thing was that ex-Russia and China ratified the attached protocol at the moment, however, America, Britain and France didn't yet.

The treaty of, taking 20 years to accomplish it, has a full meaning itself even though some nuclear powers didn't join. It means the Pacific Islands were subjects which took the main part in the agreement, not powerful countries - these mini-states show careful and positive efforts for their security of safety in the grim reality of international society. But this treaty didn't reflect everything. Even if the treaty was established, the struggle is still going on for the security of the Pacific Islands. Comparing the South Pacific Islands with other atomic advanced countries and nuclear powers, they seem to be a 'small fish' of the ocean. Although almost all these countries acquired independence through the 1970s and 1980s, they still maintain

dependent relations with former suzerain states and existing powerful countries. The reason it becomes th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environment pollution is a big issue these days, but many advanced nations are in difficulty about rubbish within the border from the people's consumption and their industrialization.

The islands forced by powers from other countries have insisted ot to make use of the nuclear for protecting their lives and developed the movement of denuclearization. Some islands adopted the non-nuclear constit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non-nuclear zone. The ecological security of these South Pacific island states has been applicable to the local government's movement 'nondefended localities' in Japan. The Japanese cities, like Nakasaki, Hiroshima, Okinawa, have been experienced the severe war fatalit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 residents, these cities have tried to initiate the peace movement of their own. Some of these moves are known to the world, especially 'Peace Festival' initiated by the city of Hirishima and Nakasaki, The International Free City establishment directed by Okinawa, etc.. These movements are basically the logic of the ecological security and nondefended localities.